



# 21세기 한국의 선택

이 자료는 지난 3월 3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의 세계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金 鎮 炫  
<세계회추진위원회 위원장>

## 1. 머리말

21세기의 선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1세기여의 한국의 근대, 현대 변화의 일반유형을 검토해 보자.

첫째는 변화의 非均質性이다. 한국의 근대이후 변화는 아직까지도 균형, 균질성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런 불균형, 비균질성이 계속될 것이다.

그간 밖의 변화가 너무 빠르거나 단절적이었다. 그래서 늘 점진적, 자발적 의식적인 안의 준비를 허용치 않았거나 우리가 밖에 대하여 무지, 불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규모가 밖의 상대자, 투입자, 경쟁자의 규모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명분과 윤리의 균형, 균질, 평등, 조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현장과 실천적 전개는 늘 불균형, 비균질, 비평화적이었다.

발전도 어떤 부문은 뚝뚝히 홀로 우뚝서 세계의 정상을 넘보는가 하면 그것이 기초이었어야 할 부문은 오늘의 후진국 수준도 안되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발전의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두번째 변화의 유형은 시간의 급진성이다.

안과 밖의 시간의 속도차이와 규모의 과도한 차이는 항상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맞이하기보다 대시는 늘 시간에 쫓기고 미래로부터 엄습 당하여 왔다.

시간의 급진성은 관심부문과, 비관심부문, 성장부문과 정체부문, 체제부문과 비체제부문간의 대극성, 양극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관심부문에서의 역사의 조속과 비관심부문의 지체가 그것이다. 기독교, 스포츠, 예술의 전당, 반도 체기억소자, 재벌, 외교공관은 조속이요, 국어, 역사정리, 관리, 정치, 비판, 질서, 창의를 지체이다.

변화 시간의 급진성은 또한 한 주도변화의 보편화와 성숙, 단속을 거친 자연스러운 다음단계 변화로의 발전, 상승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현재의 주도변화와 그 앞과 뒤의

주도변화간의 단절로 인하여 우리 사회공동체 안에는 성숙과 소화가 덜된 重層的 잔영들이 덕지덕지 散逸되어 있다. 과거와 근대와 현대와 미래가 重層的으로 쌓여있고, 戰前과 戰中과 戰後와 미래가 重層的으로 널려있고 독재와 교과서민주주의와 가부장 정치문화와 발가벗은 私利가 숨어 있다.

현대, 근대 한국변화의 비균질성과 시간의 급진성은 결국 한국에서의 변화의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밖이며 우리는 변화의 객체이거나 대리자이며 이 땅은 전장의 代士이거나 실패장이었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제 21세기의 선택을 고찰함에 그 지향은 어떤 쪽이건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의 비균질성과 시간의 급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의 주체와 주연, 주무대, 중심의 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관련해서의 21세기 한국의 선택은 더욱 그러하다.

韓末의 西勢東漸과 1945年の 美蘇冷戰 시대라는 두 큰 외래 국제 파수에 우리는 밀리기만 했고 덮치기만 당했다. 탈냉전, 탈공업화, 탈근대화, 제3의 물결, 제2차 산업혁명을 맞는 1990년대의 21세기의 준비에서는 세계 지구적 파도를 올라타야 하고 파도를 조절하는 주체적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한다.

1942년 11월 28일 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고 독립에 따르는 건국강령을 제정했다. 그 제1장 총강의 3항에서는 일철의 토지는 사유제도를 금하고 국유로 환원하도록 확정했다.

또 제3장 건국의 6항이 경제에 관한 조문인데 다음과 같다.

가. 大生産機關의 工具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沼澤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산업과 은행, 전신, 교통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주: 재산이라는 뜻)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등기업은 사업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은 시설한 官, 公, 사유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단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철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철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貧工, 貧農과 일철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은 공영의 집단생산기관에 充公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상속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등)

마. 국제무역, 전기, 自來水(駐: 상수도)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電映, 극장 등을 국유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노동보호)

사. (工人과 農人의 의료면비)

아. (토지는 自力 自經人에 분급원칙)

이상의 경제철학과 정책에서 “國有”에의 지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만든 강령이 아니다. 바로 이들과 이념투쟁을 벌였던 우파 민족주의를 대변하던 임시정부의 52년전 강령이라는 데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주체적 선택의 어려움과 혁명성을 예감하게 한다. 우리가 정통이라 믿는 우리 선열들의 정책을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 미안파나 북한, 몽고의 꼴이었을 것이며 오늘 이 토론을 개최하는 주최도, 장소도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지금 세계적 보편원리로 믿고 우리가 이를 채택, 유지 발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믿는 시장경제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 비전, 정책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근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시장경제, 민간기업주의 원리와 정책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고 시대의 파도를 탄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와 다원가치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으로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韓末의 개화나 해방 이후 남쪽의 시장경제체제는 안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선택 당하고 타율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6.25 전후 한국의 시장경제, 민간기업주의, 가격현실화가 정착되기까지 미국의 역할, 간섭과 오늘의 동구, 중공, 북한의 가격현실화, 시장체제로의 전환의 고민을 비교해 보라)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선택 당함의 被動과 他律과 無策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또 이런 피동과 타율은 창조의 힘이 나 미래 개척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현재의 연장”이 계속되면 발전을 지속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거나 “國軍”이 좋으니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被動과 反主體와 타율이나 1등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는 2등주의로서는 21세

기의 준비와 선택을 관리할 수 없다.

어쩌면 21세기 한국의 선택은 한국으로서는 근대이후 최초의 주체적 선택일 것이다. 주체적 자율적 선택이어야 한다.

## 2. 선택 1—質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선진국이 선진국이고자 했던 이유, 즉 소비주의적, 향락적 편리의 추구나 식민지 확보, 군사적 팽창 때문이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별장 갖고, 요트 갖고, 해외관광으로 향락하고, 필리핀 식모 부리고자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복지과 평화의 최소조건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만은 중진국, 후진국으로서도 공동체로서의 생존과 시민의 복지와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지정학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세계에서 실력(군사력, 기술력, 산업력, 자본력, 자원, 인구, 공간, 문화 등)으로 1등, 2등, 3등, 4등 하는 美國, 日本, 中國, 러시아의 4대강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는 다시는 없다. 하나의 강대국 옆에 살아도 작은 나라는 끊임 없는 비극을 겪는다. 하물며 세계 최대의 4강국과 접해있는 한국의 지정학은 우리가 최강국과도 “결정적 협상력”을 갖는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 비극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근대사는 바로 이 4대강국과의 거래의 역사였으며, 비극적 거래의 역사였다. 중진국과 후진국의 역량으로서 4대강국과 의미있는 협상력을 갖출 수 없다.

오직 質의 선진국이 됨으로서만 가능하다. 한국의 실질적 국력은 ① 어느 한 강대국이 또다른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을 한번의 카드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되고(즉 그럴 경우 결정적 보복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② 한국의 힘이 4강의 어느 하나와 연합하면 그 연합된 힘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류질서 기본체제로 승화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 臨界點(Critical Mass)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한국이 4강의 균형자가 될만한 힘을 가져야 생존과 평화가 유지된다.

한국의 미래선택에서 경제주의적 접근은 이점에서 큰 제약과 한계를 갖는다. 1979년 영국 서섹스대학 한스 싱거 교수는 한국이 후진국의 만행으로서 중간기술을 갖고 사는 선택(그는 선진국 OECD클럽의 막둥이 되는 또다른 낙관적 시나리오와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후진국과는 격차가 좁혀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그렸었다)을 권장했다(*Has The Korea a Model Future in a Changing World?*)

UCLA의 리차드 드로브닉 교수는 1992년 한국이 일본이 지휘자가 되고 대만과 화교가 제1바이올리니스트 노릇하는 교향악단의 한단원이 되는 것을 예측했다. (*An American's Personal Perspective 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Pacific*, *International Crossroads*, NIRA Library, August 1992) 드로브닉 교수는 원래 1985년에는 한국이 중남미, 대만, 이스라엘과 더불어 美國圈의 멤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구도는 모두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NAFTA나 AFTA나 大中華經濟圈이나 日本門圈이나 같은 선택의 파라다임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거래하며 살고 겨루고 살고 극복하며 살아야 할 대상은 대만이나 타이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나 스리랑카 이라크, 이란이나 이집트나 케냐나 브라질이나 페루가 아니다. 이들과 상대하여 산다면 중진국으로서도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우리의 상대는 바로 세계에서 1, 2, 3, 4 등 하는 美, 日, 中 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평화와 복지의 최대조건이 아니라 최소조건이 바로 이들과 결정적 협상력을 갖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 지리적 조건은 기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아프리카, 인도양, 남미로 이동하거나, 4대강국이 갑자기 중진국으로 후퇴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해도 量으로서 이들과 대결하려해선 안된다. 質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기술의 質, 정보의 質, 산업의 質, 문화의 質을 높여 선진화를 이루고 기술, 정보, 산업, 문화의 몇가지 전략적 선택부분은 4대강국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릴 수 있도록 결정적 침단체와 우위를 발명, 창조, 유지해야 한다. *Most Power*가 아니라 *Best Power*의 나라라야 한다.

양적,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선진국화가 아니라 質과 핵심과 원천으로서 量을 꺾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의 길이어야 한다.

모든 부문을 일류화, 일등화 하기에는 우리의 규모가 모자란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이 조건은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은 백가지의 2등급보다 5가지의 1등급이어야만 4대강국에 협상력이 생긴다. 따라서 어느 부문을 전략적 부문으로 선택하고 그 전략적 부문에서도 어느 요소, 어떤 과정, 어느 부위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선도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선택과 掄象, 그리고 선택부문의 세계전략화, 일등화, 이것만이 質의 선진국화를 가능케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술, 산업, 정보, 문화부문을 전략적 분야로 선택코자 한다.

1. G7 프로젝트에 책정된 반도체, 유전공학, HD-TV, 차세대자동차, 대체 에너지, 환경기술 등 11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촉진시키고 모든 산업, 서비스, 국방, 행정의 과학기술집약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2.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그리고 모든 산업, 사회, 행정 활동의 정보화를 歐美보다 우리가 더 먼저 더 깊이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과감한 행정개혁, 민관 일체의 노력에 의한 전국 B-ISDN화(광역통합정보통신망), 비디오 폰(화상전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변화로 교통지옥을 해소하고 지식사회화를 앞당긴다.
3. 한국만이 갖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생긴 눈물의 퇴적층이며 따라서 이제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갖게 된 美, 日, 中, 露의 韓僑들을 정보자원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힘으로서의 정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4대강국에 끼여있는 우리는 4대강국에 대한 최대의 정보입수, 축적, 분석, 가공, 피드백(Feed back)을 통해 새정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의 원천이 되도록 국가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4.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서, 미국의 상업화된 대중사회, 일본의 폐쇄적 경제주의, 중국의 중화주의, 러시아의 슬라브적 팽창주의를 모두 극복하고 보편화할 수 있는 새 가치, 새 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특히 對美, 對日 관계에서 예술, 문화역량이 집중해야 할 일은 많다.

우리 고유문화재, 전통의약, 전통지혜를 현대과학기술로 재검증, 재해석, 재결합시켜 새로운 물질특허,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적인 힘의 중심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다. 동서양의 힘의 이동이라는 세기적 변화에서 한국은 질에서 이기면 일등의 나라가 된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일류화, 일등화, 균형자로 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한 節目이다. 체제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통일, 통일이 됐어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는 통일, 통일이 됐어도 오늘의 베트남 같이 감당을 못하고 후퇴하는 통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택은 질의 선진국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후발자가 선발자를 쫓아가고 이기는 원리법칙이 있다.

첫째는 철저한 모방이다. 철저한 모방만이 앞서간 자의 앞선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모방을 해도 일등 모방해야 한다.

둘째는 스승을 이기겠다는 경쟁의 정신과 창조의 자세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모방해도 모방만으로는 부가가치와 창조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비록 모자라서 배우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배움에 그치지 않고 새것, 새혁신을 더해 그 스승을 물리치겠다는 경쟁의 정신이 불타야만 창조가 결실된다.

셋째는 국제화이다. 새 창조와 일등, 일류화를 위해서는 전세계에 정보의 안테나를 열고, 비교의 준거를 전 세계로 펼쳐야만 새로운 혁신,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전의 자극과 동기를 얻게 된다.

넷째, 자국의 전통과 문화 특유성을 유지하여 이를 새 환경에서도 지키려 노력하는데서 새 혁신이 나온다. 또 특유한 자기 사회, 문화, 경제, 환경조건에 충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특수조건이 세계의 보편적 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 선택 2-지구사회 세계공동체의 주동자여야 한다.

인류는 이제 40억년의 지구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사회」를 이루려 한다. 이제 지구라는 행성의 물과 땅과 공기와 태양의 빛을 받고 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들은 처음으로 지구가족, 지구사회, 지구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의 안전과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통된 문제군(Global Problematique)으로서 인구, 자원, 에너지, 환경, 도시과밀화, 교통, 노령화, 가족의 파괴, 마약, 핵, 생물화학무기, 테러, 빈곤과 난민-문제들에 대하여 (국제적 관점이 아니라) 인류적, 지구적, 세계적 관점에서 여러 결정과 정책들을 조직화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

「A Strategy for the Future(1974)」 저자이자 피아니스트이며 교수인 어빈라즐로가 말하는 세계시스템 구축의 제 2국면에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세계 항상시스템」이나 임마누엘 칸트가 1775년 그의 「영원한 평화」(Perpetual Peace)에서 그린 「세계공화국」이 한시대안에 성취되리라고 성급히 단정하는 과이상주의자여서 안된다.

그러나 역사와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세계적, 지구적 단위의 통합화라는 큰 공전의 궤도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런 인류로서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진보적 자유주의적 이상을 버려서는 안되고 신념과 대책을 키워야 한다.

그것도 선도적으로 키우고 비전과 원리와 정책을 정밀하게 연구해 나가야 한다. 연구에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거래하는 4대강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미, 러, 중은 사실 잠재력만으로 보면 식량, 자원, 에너지, 기술, 공간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급 자족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한국, 스위스, 벨지움,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야말로 식량, 자원, 에너지의 절대적 수입국(대외존형소국)으로 그들의 생명의 안전과 복지가 지구사회에 더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더구나 핵의 문제, 남북빈곤의 문제, 난민(보트피플)의 문제에도 심각한 환경의 위협아래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 유례없는 과도한 수도권집중과 도시과밀화로 인한 환경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중국의 공업화와 개방이 가지고 올 에너지자원 수급문제와 환경악화요인이다.

만일 중국의 에너지소비가 현재의 추세대로 증가하면서 1인당 소득이 한국수준 또는 대만수준이 된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진다. (1992년 기준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0.59toe로 총에너지 소비량은 6억8천만

toe이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소비량은 2.66toe와 2.72toe이다. 1992년 현재 아시아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1,855백만toe이고, 유럽은 1,407백만toe이고 미국은 1,960백만toe이다.)

더구나 에너지 소비패턴마저 현재같이 석탄 77.5% 석유 19%로 거의 전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CO<sub>2</sub> 발생의 석탄의존의 압도적인 비중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하늘과 황해바다는 산성비와 공해의 늪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새로운 소비증가의 대부분이 바로 황해 서해안 지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 특히 美歐축이 신규원자력 발전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데 비해 세계에서 최고의 과밀인구집중지역인 한국, 일본, 중국, 대만만이 201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70개와 같은 70개의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세계적 군축과 탈냉전의 세계추세에 역행하듯이 아시아 인구과밀지역의 집중적인 원전건설은 사전, 사후 문제 관리에 대한 그리고 폐기물처리에까지 충분한 안전장치의 강구없이 추진할 경우 새로운 재앙일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80년대말 외국기자와의 회견에서 만일 서방축이 중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지 않으면 1억 2천의 보트피플이 태평양을 떠다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해도 경제성장을 못해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도시과밀화, 도시집중과 교통혼잡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의 문제요 부산의 문제이다. 북경과 상해와 광둥과 천진과 무한의 문제이며 방콕과 자카르타와 마닐라와 타이페이의 문제이다. 즉 아시아 중진국의 문제이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인류공동의 문제군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세계적 문제의 핵심이요 실험관이 되었다.

한국이 어떻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 땅의 물과 산과 공기와 바다와 자원과 에너지와 핵과 군사분류와 도시과밀과 경제성장과 세대전쟁과 노령화와 복지를 관리하며 다른 문화 문명 공동체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꾸려 갈 것인가.

이 인류의 문제 지구사회 공동체의 문제는 가지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주려고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인류공동체의 남에게 줄 것을 마련하고 실제로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 남을 살리고 남이 삶으로써 우리가 산다」는 인류공동체적 삶과 생명의 원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진보적 학자들 가운데 「일본전략선언(Civilian Manifesto 1991)」을 통해 1) 게이오대학 야쿠지지(藥師寺泰藏)교수의 대외 정부원조중 환경과 쉐 에너지 항목을 격증시키고 민간기술을 공공재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나 2) 동경대학 이와타(巖田一政)교수의 국제적 보조금 시스템도입으로 GATT내에 「구조조정 기금」 설치제안은 주목할만 하고 3) 조일신문의 후나바시(船橋洋一)는 「일본의 대외구상(1993)」를 통하여 「인권보장, 환경보전, 개발촉진, 평화창조, 평화유지를 주목표로 하는 세계에의 관여와 위치를 설정하고 경제력,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시빌리안 파워(민생력)을 수단으로 UN, IMF, 세계은행, GATT, G7등을 시작으로 보편적 다각적 기구, 포럼을 무대로 그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글로벌 시빌리안 파워(지구 민생 대국)를 제창하고 있다(즉 아이디어, 인간적 자질, 매력, 영향력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

진보적 입장은 아니나 쿠사카(日下公人) 교수(多摩大)의 「명예로운 고립의 연구(1993)」에서의 「일본 2000플랜」 중 「세계평화 기금」 2000억 \$ 제안(미소의 군축실업군인들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사용) 역시 참고할만 하다.

한국은 1996년 OECD가입을 결정했다. 그 의무 조항중에 하나로 후진국 원조 조항이 있다. GNP의 1%를 목표로 그 중 무상원조와 공공차관(ODA) 0.7%, 민간상업차관이 0.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목표와 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뿐이다. 잠정적으로 ODA 0.4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ODA는 0.06%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계적 공동체” 지구사회의 주동자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 예를들면 2000년까지 ODA를 GNP의 0.5%까지 올리는 등 액수에도 충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세계공동체의 중심국가다운 안목과 뜨거운 가슴이 반영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결정에 치밀한 전략과 정열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통일비용도 이런 세계공동체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 4. 세계 평화의 발신지라야

한국의 조건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더 평화적이기를 요구하고 세계의존적이다. 에너지, 자원, 무역의 해외의존도, 지정학적특성, 도시과밀과 교통 환경 조건, 핵과 군사조건, 인구와 공간조건, 땅과 바다와 하늘의 조건 그 모두는 우리가 범인종적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 의식과 행동규범을 창조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은 역사상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평화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거기에도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촉점이요, 하버드大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文明衝突(The Clash of Civilization)假說」에 의하면 문명끼리 부딪치는 “斷層(Fault)지역에 속한다. 우리가 이런 지리적 문명적 조건에서 생존과 평화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관련되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을 모두 포용하거나 모두를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비전, 철학, 계획, 정책을 창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창조는 국수주의적 팽창주의나 폭력적 대국주의, 인종적 옹비론이나 경제적 대대약 같은 量的 물리적, 숫자적, 권력적 접근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신비로운 開關論이나 鄭鑑錄 같은 예언에 기울거나 쇄국형중립이나 운명적 비판론에 빠져서는 안된다.

20년전 『성장의 한계』를 쓴 D. H. 미도우즈등 같은 저자들은 1992년에 『한계를 넘어서』(Beyond The Limits)를 새로 썼다. 그 마지막 장의 결론에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가장 깊은 구별은 인간이 사랑을 기반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여부의 판단에 있다」고 쓰고 있다.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인류공동문제의 한계(성장, 환경, 자원, 인구, …)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길은 있다. 문제는 심리적 정치적으로 즉 인간관계가 이런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1932년 J. M. 케인즈가 그의 에세이 「설득」에서 예측했던 대로 「경제문제」가 자리를 비키고 “우리의 진정한 문제 즉 인간관계와 생활의 문제 창조와 행동 그리고 종교의 문제”에 맞부닥쳐 있는 것이다.

그 해답이 로마클럽 제5 보고서인 『인류의 목표』(Goals

for Mankind 1977)에서 보인 세계관 즉 인간과 자연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론(또는 「동양의 제종교의 전체론이나 생태학이나 사회과학의 보다 새로운 개념의 몇 가지와 가장 친근성을 갖고 있다」)이나 리즐로 교수가 세계시스템에서 강조하는 바 인간과 땅 바다에서 사는 동·식물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까지 넓혀 그 관계를 처리하는 가치규범(인간이외의 제실체에도 주체성을 인정하는)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굴절 많은 경험과 삶의 조건 그리고 사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까지를 흡수하는 강한 소화력을 우리가 우리 조건에 충실하면 반듯이 인류, 지구사회가 요구하는 새 가치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공동체와 세계공동체를 연대하고, 한국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결속하고, 한민족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을 융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세력균형상의 불리가 우리로 전환되고 반도로서의 단층이 접합점으로 변전되고 굴절많은 경험은 다문화흡수 무대가 되고 가장 많은 인류문제군을 끼여 안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세계 보편적 체제 발명의 모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 수렴은 자유와 동시에 자기 행위의 남(인간, 사회,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자발적 억제, 지구적 공유물과 공공재 관리에 대한 자율적 공헌, 수직적 편리보다 수평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 같은 개인 및 집단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의 조건과 한국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가능성은 한국이 세계평화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스위스의 전쟁 비극의 체험이 세계 적십자운동을 창조했고 스웨덴의 농업시대의 가난이 공업시대들어 노벨賞으로 승화했고 일본은 미국이 내린 히로시마(廣島) 原爆과 맥아더 헌법으로 평화국가로 변신했다.

한국은 그 비극과 가난과 전쟁과 환경과 지정학, 지정학의 조건이 분명 스위스보다 스웨덴보다 일본보다 더 차원 높고 더 깊고 더 선명한 평화의 철학과 비전과 상징과 정책을 잉태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 비극, 가난, 환경, 분단, 전쟁 그리고 정치 경제적 악조건을 한으로만 삭이거나 운명으로 치부하거나 회피하고 정면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다루지 안했기 때문에 평화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의 성실한 창조적 노력의 부족으로 해서 평화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테러, 월남전, 중동건설, 독재, 고문, 데모 등으로 오히려 반평화의 잔인하고 폭력적 민족이나 국가라는 인상을 심었다.

나와 이웃과 나라와 인류의 지구공동체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충직하게 하면 반드시 한국이 새 지구사회의 가치규범으로서 평화의 철학과 상징과 정책의 발신지가 될 것이다.

나는 1979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6차 세계회의에서 『인류 복지세』(A Proposition for the Global Welfare Tax, 약자 GWT)를 제안했다.

인류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각출은 선진후진국의 개념보다 ① 1인당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② 자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③ 상품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④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리고 외국으로 인구가동이 많은 나라일수록 ⑤ 군사예산이 많은 나라일수록 많이 거두자고 제안했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GWT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 나라에 속한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자각하고 교육함으로써 새 인류지구적 시스템과 가치규범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평화의 가치와 시스템 속에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지정학적, 불리와 제약을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키고 일류화와 일등화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진정 민족주의에 충실할수록 세계주의 지구사회에 가까워지고 세계주의, 지구사회의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고자 하면 그럴수록 한국의 조건해결에 즉 한국민족주의에 친근해질 것이다.

한국과 한민족은 보통의 나라 보통의 겨레 보통의 시민으로서의 생존과 평화가 불가능하다. 한국이 보통의 나라로 산다함은 현재는 4강에 그리고 근대이전에는 대륙과 해양세력의 고전적 충돌에서 편들거나 사대주의로 생명을 부지했던 그 제도 그 관행을 탈냉전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전적 세력 배치에 역사가 환원됨에 다시 그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밀도 높고 충실하고 비상한 차원의 가슴과 머리와 손 발로서만 생존의 운명이 개척되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의 비상한 공동체이다. ♣